

## 국 제 법

이상구 교수 : 해설 및 총평

## (총평)

1. 역대급 난도로 보인다.
2. 통상의 A/B급 구분이 무색하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B급이 1,2,3,4,9,12,13,17정도로 보이고, 나머지 12문제 정도가 A급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3. 난도를 높이는 기술적 방법이 총동원되었다. 잘 알려진 조약이나 테마는 매우 디테일하게 출제했고, 새로 출제된 조약이 상당수이며, 판례도 매우 디테일하게 질문했다. 국제법사상도 7급에서는 대체로 20년 이내에서는 최초 출제되었다.
4. 국제기구책임초안, ICC관할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외기권 원격탐사원칙,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오타와선언,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 확장탄환에 관한 헤이그선언, 생페테르부르크선언, 짐수탄에 관한 협약, 런던뎀핑의정서, 유류오염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TBT협정 등이 새롭게 출제된 조약이나 법률이다.
5. 판례는 새로운 판례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콩고영토 무력분쟁사건, 네덜란드 국내법원 판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영국-이란 석유회사사건 정도가 새로 출제된 판례들이다.
6. 기존 판례라 할지라도 새로운 논점들이 다수 출제되어 난도가 가중되었다.

문 1.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법적 확신만을 통한 국제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 ② ICJ는 Fisheries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집요한 반대자(persistent objector)론에 근거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 ③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두 국가 간의 국제관습법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④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비교적 단기간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답:①

해설:①ICJ는 일관되게 법적확신과 일반관행이 모두 있어야 관습법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Fisheries사건은 집요한 불복국가를 인정한 판례이다. ③양자관습의 성립가능성을 긍정한 판례이다. ④단기간에 관습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단, 관행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관행으로부터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가 당해 관행에 동참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평:기출논점이 그대로 출제된 B급 문제. ④북해대륙붕사건에서 단기간 관습 성립 가능성 인정 논점은 비교적 새롭게 포함된 논점으로 보인다.

문 2. 국제법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Bynkershoek는 자연법론에 입각한 국제법관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 ② Gentili는 국제법학을 신학이나 윤리학으로부터 분리하고 확립한 학자로 평가된다.
- ③ Zouche는 국제법을 jus inter gentes 대신 jus gentium으로 호칭하자고 주장하였다.
- ④ Bentham은 jus gentium을 law of nations로 번역하여 사용한 최초의 학자이다.

정답:②

해설:②Gentili는 국제법학을 신학등으로부터 분리한 최초의 학자로 평가된다.

- ①Bynkershoek는 18세기 법실증주의적 국제법관을 확산시킨 대표적인 학자이다. 법실증주의는 자연법론과 달리 국가의 의사에서 국제법이 비롯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 ③Zouche는 국제법을 jus gentium 대신 jus inter gentes로 호칭하자고 주장했다.
- ④Bentham은 jus inter gentes를 interantional law로 칭하자고 주장했다.

문제평: 2020년 9급시험부터 국제법 초기 사상가들을 출제하기 시작했다. 이는 최근 이어져 온 국제법 출제범위 확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출제의 무게중심이 선발행정의 용이성을 위해 변별력을 높이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 3.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04년 채택된 「국가 및 국유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상 타국 법의 적용에 대한 국가의 동의는 그 타국 법정의 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간주될 수 없다.
- ② ICJ는 Arrest Warrant 사건에서 주권면제의 범위보다 강행규범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하였다.
- ③ ICJ는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주권면제의 범위와 강행규범의 내용은 서로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④ 이탈리아 최고법원인 Corte di Cassazione는 Ferrini 사건에서 국제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주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답:②

해설:②외무장관의 인적면제가 인정된 판례이다. 콩고 외무장관이 재직전 '인도에 대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면제가 인정된다고 본 판례이다. 따라서 강행규범보다 주권면제의 범리를 우선시켰다고 볼 수 있다. ①면제의 묵시적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③독일과 이탈리아 간 사건이다. 이탈리아는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도 면제를 부여한다며 강행규범 위반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ICJ는 강행규범은 이에 위반되는 행위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을 따지는 실체적 규범인 반면, 주권면제의 범리는 관할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절차적 규범이므로 양 규범은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④강행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는 행위시 '면제의 묵시적 포기'로 볼 수 있다는 이론에 기초한 판시이다.

문제평:Arrest Warrant사건은 처음 출제되었다. 보편주의에 기반한 입법관할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할권이 외교면제 등의 제약을 받음을 잘 보여준 사례로서 출제 가능성이 높았던 판례이다.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서도 외교면제를 적용했음을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나머지 선택지는 대부분 기출된 것이나,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 선택지는 논점이 확대된 것이다. 면제 인정여부가 기출되었으나, 새롭게 출제된 논점은 주권면제범리와 강행규범간 관계를 새롭게 물어보고 있다.

문 4. 국제법상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 및 정부 승인은 합헌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승인은 국가의 일방적 재량행위이다.
- ② 창설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 승인은 신생국가에 국제적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 ③ 1933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은 승인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 ④ 반란 집단이 소재한 국가의 중앙정부가 아닌 제3국은 교전단체 승인을 할 수 없다.

정답:②

해설:①국가승인은 합헌성과 무관하며, 정부승인의 경우 합헌성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주의가 통설이므로 틀린 문장이다. ③동 협약은 승인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제3국도 자국민보호

를 위한 합법적 교섭을 위해 교전단계를 승인할 수 있다. 엄격한 요건을 요한다.

문제평:평이한 문제. 1933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가성립요건 및 승인과 관련하여 여러번 기출된 조약이다.

문 5. 국제법상 자위(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자위권 행사의 합법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조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 ② ICJ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간의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사건에서 콩고령에 주둔하는 비정규군 조직이 우간다를 공격한 행위에 대하여 우간다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③ UN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조안」, 주해에 따르면 자위권 행사가 「UN헌장」 제2조제4항 의무 외 다른 국제의무의 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이행의 위법성은 동향의 위반과 관련되는 한 조각된다.
- ④ 아직 임박하지 않은 추정적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UN헌장이 아닌 Caroline 공식에 의하면 수락될 가능성이 크다.

정답:④

해설:④Caroline공식(또는 Webster 공식)은 자위권 발동에 있어서 필요성을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Caroline공식에 의하면 ‘절박한(imminent)’ 무력공격에 대한 선제적 공격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임박하지 않은 추정적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소는 독일 전범들을 단죄한 재판소로서 심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위권을 들어 정당화를 시도하였고, 재판소는 자위권 요건 충족 여부는 심리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자위권으로 피고들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②비정규군의 행위가 콩고로 귀속되지 않는 한, 비정규군의 무력공격을 자위권 발동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③자위권은 무력사용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따라서 자위권 발동 과정에서 다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나, 무력사용금지의무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포괄적으로 자위권으로 정당화 할 수 있다.

문제평: 난도가 높다. 자위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 자위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비국가행위자가 무력공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자위권으로 위반할 수 있는 무력사용금지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방적 또는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캐롤라인공식의 적용 등은 자위권 관련해서 출제가 거의 되지 않은 새로운 논점들이다. 기출된 기본 테마는 심도있게 출제하는 출제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문 6.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 관련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조안」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에 자위는 포함된다.
- ② 네덜란드 대법원은 Nuhanović 사건에서 UN PKO 활동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라도 문제의 행위에 대해 네덜란드가 실효적 통제를 하고 있었다면 그 책임은 네덜란드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 ③ 유럽인권재판소는 Behrami 및 Saramati 사건에서 UN KFOR의 행위는 피고 「유럽인권협약」 당사국들에 귀속된다고 판결하였다.
- ④ UN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조안」에 따라 국제기구 행위의 국제위법성은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③

해설:③이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UNKFOR(UN Kosovo Forces)의 임무에 대한 최종권한과 통제를 UN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유럽인권협약 당사국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UN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①국가책임협약 조안 상의 여섯가지 위법성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②PKF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UN으로 귀

속되어 책임을 UN이 지나, 과전국의 실효적 통제하에서 행동한 경우 과전국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문제평:국제기구의 책임에 대한 문제. 난도가 제법 높다. 국제기구책임조안 출제가 예상되었던 문서다. 게다가 국제기구 기관의 행위에 의한 국제기구의 책임과 예외, 국제기구 책임과 국제기구 회원국 책임의 분리 등이 논점으로 출제되었다. 마무리특강 자료를 정독했으면 채점을 볼랐을 수도 있다.

문 7. 국가책임 관련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상황은 자연적 또는 물리적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으나, 인간의 행위로는 발생될 수 없다.
- ② 필요성(긴급피난)은 대응조치, 자위 등의 사유와 같이 선행되는 국제의무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다.
- ③ 불가항력과 달리 조난의 경우, 행위 주체의 측면에서 의무의 준수 여부는 선택적이라 할 수 있다.
- ④ 동의국이 상대국에게 사후 동의를 부여하는 경우, 이는 동의국의 상대국에 대한 책임추궁권을 저해하지 않는다.

정답:③

해설:③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주체가 위법행위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조난의 경우 의무위반의 ‘회피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를 준수하기로 선택한다면 국가기관이나 그 통제하 사인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의무위반을 선택하는 것이다. ①인간의 행위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대규모 반란이 발생한 경우를 예시할 수 있다. ②긴급피난은 위법행위를 전제하지 않는다. ④동의의 경우 사전동의가 일반적이나 사후동의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가해국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즉, 책임추궁권이 저해된다.

문제평: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비교적 중급난도의 문제이다. 단순히 여섯가지를 암기했으면 어려울 수 있다. 의무 준수 여부의 선택성의 개념을 이해했는지가 출제포인트. 조난이나 필요성(긴급피난)은 의무위반여부가 선택적이다. 즉, 의무위반의 회피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 8.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대의 지휘관(지휘관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상급자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그 지휘관 또는 상급자도 각 해당조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②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하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④

해설:④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제3조 제5항).

문제평:‘실용주의’ 출제기조하에서 우리나라 관련 법률 출제를 예상했었다. 영

해 및 접속수역법, EEZ 및 대륙붕법, 범죄인인도법, 난민법, 한일 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로마협약 이행법률 등이 물망에 올랐었다. 로마협약 이행법률이 출제되었다. 대부분은 맞췄을 것으로 보인다.

문 9. UN의 인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제도(UPR)는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 ②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 기관이다.
- ③ 「UN헌장」에 따르면 총회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원조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 ④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 총회가 임명한다.

정답:④

해설:④인권고등판무관은 UN사무총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문제평:B급에 해당하는 쉬운 문제.

문 10.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
- ② 국제해저지구 이사회는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제11부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총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하여 내륙국의 권리와 편의를 설정하고 있는 이 협약의 규정과 해양출입권의 행사에 관한 특별협정은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에 포함된다.
- ④ 내륙국의 국기를 제양한 선박은 해양에서 다른 외국선박에 부여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정답:①

해설:①해양법협약 제241조. ②총회는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부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제185조 1항). ③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126조). ④동등한 대우를 받는다(제131조).

문제평:답을 잘 고른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체감 난도는 높다. 대체로 해양법협약 제10부(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와 자유) 부분에서 출제되었다. 아마도 해양법에서 기출된 부분이 너무 많아 출제팀의 고뇌가 깊었던 것 같다.

문 11. 국제우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75년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이 행해진 우주 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UN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따라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모든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 ③ 1986년 「외기권으로부터 지구의 원격탐사에 관한 원칙」 제13의 해석상 탐사국은 피탐사국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구해야 한다.
- ④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따라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구성 부분이 그 등록국인 본 조약의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동 당사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정답:③

해설:③원격탐사에 있어서 탐사국은 피탐사국의 사전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고, 다만 피탐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약」에 응할 의무가 있다. ①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이 행해진 우주 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

**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4조 제2항). 참고로 제2조 제1항은 우주 물체가 지구 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되었을 때 발사국은 유지하여야 하는 적절한 등록부에 등재하므로써 우주 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각 발사국은 동 등록의 확정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강제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된 우주물체와 관련된 추가정보의 제출은 재량이다. ②평화적 목적을 위해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평화적 이용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동 조약 제8조에 의하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동 물체가 외기권 또는 천체에 있는 동안 동 물체 및 동 물체의 인원 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한다 천체에 착륙 또는 건설된 물체와 그 물체의 구성부분을 포함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소유권은 동 물체가 외기권에 있거나 천체에 있거나 또는 지구에 귀환하였거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물체 또는 구성부분이 그 등록국인 본 조약 당사국의 영역밖에서 발견된 것은 동 당사국에 반환되며 동 당사국

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물체 및 구성부분의 반환에 앞서 동일물체라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제평:③원격탐사원칙은 처음으로 출제되었다. 나머지 간간이 출제되었으나 ①에서 추가정보의 제공이 재량임은 처음 출제되었다. 원격탐사관련해서는 조약이나 관습이 부재하여 출제에서 제외되어 왔던 분야인데 전격 출제되었다. 출제의 성역은 어디인가?

문 12.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원국에게 패널보고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는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을 위한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패널보고서는 제공된 정보 및 행하여진 진술내용에 비추어 분쟁당사자의 참석없이 작성되고, 개별 패널위원이 패널보고서에서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 ③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하며, 자신의 권고에 추가하여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DSB는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3국을 제외한 분쟁당사국인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언제라도 그 이행문제를 DSB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④모든 회원국이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이후 언제라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수 있다(DSU 제21조 제6항).

문제평:DSU조항을 그대로 출제한 문제로서 난도가 높지 않다. 오답은 상당히 스마트하게 유도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13.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기구가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갖는 것과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 ②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민간단체로 출발했으나, 오늘날 정부간 국제기구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받는 독특한 존재이다.
- ③ UN국제법위원회 2011년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에 따라 국제기구의 행위는 그 행위 발생 시에 그 국제기구가 문제의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 ④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조에 따라 국제기구의 조약 체결능력은 그 기구의 규칙에 따르나, 국제기구는 설립 조약상의 명문 규정 이상으로 조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④

해설:④ICJ판례에 의하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설립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리이다. ①국제기구의 국제법인격과 국내법인격이 구분된다는 취지이다.

문제평:국제기구의 일반론에 관한 평이한 문제. 대체로 기출논점을 출제하였다. 1986년 조약을 원용함으로써 평이함을 희석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문 14. 극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59년 「남극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198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의 계약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의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한다.
- ② 북극지역의 원주민을 대표하는 일부 민간단체는 오타와선언으로 설립된 북극이사회에 영구참여자의 자격으로 참여하며, 북극이사회회의의사결정은 절대 다수결에 의한다.
- ③ 1991년 「남극조약 환경보호의정서」는 남극환경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남극조약지역에서 과학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광물자원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금지한다.
- ④ 비북극국가들, 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의 정부 간 및 의회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기구는 북극이사회로부터 옵서버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정답:②

해설:②1996년 오타와선언을 통해 설립된 북극이사회 의사결정은 회원국들의 컨센서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영구참여자들은 투표권이 없다. ④ 그 밖에 북극이사회는 국제기구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북극이사회회의의 8개국은 <북극지방의 수색과 구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문제평:북극은 처음 출제되었다. 남극조약이외에 남극조약체제가 본격 출제된 것도 처음이다. 고난도 문제이다. 국제법의 고난도문제는 법리나 규정 자체를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출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렵게하는 경우도 있다.

문 15.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그 조약이 발효한 후의 일자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가 확정되는 일자에 그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 ②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모든 국가는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가지며, 개정하는 합의는 개정하는 합의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는 조약의 기존 당사국인 어느 국가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 ③ 조약의 불소급에 따라 이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조약이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의 규칙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그 발효 후에 국가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④ 전조약을 시행 정지시킨 것만이 당사국의 의사이었음이 후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는 경우에 전조약은 그 시행이 정지된 것으로만 간주된다.

정답:③

해설:③협약 제4조는 그 제목이 '협약의 불소급'이다. 그래서 ③번 선택지는 "조약의 불소급에 따라"를 "협약의 불소급에 따라"로 고쳐야 한다. ①예를 들어 조약 발효후에 새로 가입한 국가는 그 가입이 확정될 때부터 조약의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②협약 상 개정조약을 수락할지 여부는 당사국의 재량이라는 의미이다. ④당사자가 동일한 연속조약을 체결한 경우 조약이 정지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문제평:조약문을 명확히 읽으라는 취지로 보이긴 하나, 조금은 당황스런 문제

로 보인다. 더 심한말도 하고 싶지만 출제자를 존중하여 참는다. 28조의 조약불소급과 제4조의 협약불소급을 구분하라는 취지로 이해는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해야하는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문 16.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영사기관은 접수국과 파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만 접수국의 영역 내에 설치될 수 있다.
- ② 영사관원은 특별한 사정 하에서 접수국의 허가를 받아 그의 영사관할구역외에서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영사기관장은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의 세 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 ④ 명예영사관을 장으로 하는 상이한 국가내의 2개의 영사기관간의 영사행낭의 교환은 당해 2개 접수국의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④

해설:④영사관계협약 제58조 제4항의 규정이다. ①“영사기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접수국의 영역 내에 설치될 수 있다.”(제4조 제1항). ②“영사관원은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그의 영사관할구역외에서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6조). ③ 영사기관장 계급에는 ‘영사대리’도 있다(제9조).

문제평:동의, 허가, 합의를 문언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고난도 문제이다. 명예영사기관간 영사행낭 교환에 대한 규정은 처음 출제되었다. 조약문을 매우 세심하게 읽으라는 취지로 보인다. 영사협약 출제범위가 확대되어온 기조를 반영한 것인데, 문장 하나나 단어 하나 하나 까지 세심하게 체크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문 17. 국제인도법상 무기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868년 St. Petersburg 선언에 따라 400g 이하의 폭발탄(explosive projectiles) 사용은 금지되었다.
- ② 교전조리 또는 전수이론은 공공양심의 요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국제인도법상 무기의 제한에 크게 공헌하였다.
- ③ 1899년 확장탄환(expanding bullets)에 관한 Hague 선언에 따라 덤덤탄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 ④ 2008년 「집속탄에 관한 협약」은 금지대상인 무기의 객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조약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답:②

해설:②마르텐스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전수이론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전시인도법 등 전쟁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서 무기의 제한을 해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현행 국제인도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평:근래 들어 전쟁법이나 전시인도법의 출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무기 규제에 관한 전쟁법 규정을 묻는 것이다. 민간인보호, 포로대우 등의 출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문 18.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고 기탁을 받은 UN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규정 당사국들과 ICJ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기탁의 법적 효력은 UN사무총장의 송부 행위에 의존한다고 판단하였다.
- ② ICJ는 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에서, 원고국이 일정한 유보를 첨부하여 선택조항을 수락한 경우 피고국은 수락선언의 성격에 따라 원고국의 유보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 ③ 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선택조항에 따른 상호주의는 동 조항하에서 부담한 약속의 범위와 실질에 적용되는 것이지 약속의 종류를 위한 조건과 같은 형식적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④ ICJ는 Anglo-Iranian Oil Co. 사건에서, 피고국의 선택조항 수락범위가 원고국의 선택조항 수락범위보다 제한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I

CJ의 관할권은 수락선언의 상호 원용 가능성에 따라 원고국의 선택조항 수락범위에 기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답:③

해설:③선택조항은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즉,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 상호간에만 강제관할권이 창설된다. 선택조항 수락선언에 부가된 유보에 대해서도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다만, 상호주의의 적용범위에 선택조항 수락선언의 종료를 위한 조건과 같은 형식적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①사무총장의 송부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ICJ의 해석이다. 즉, UN사무총장에게 도달한 경우 선택조항 수락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타 당사국에게 송부되어야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②원고국의 유보를 피고국이 원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이다. 노르웨이는 프랑스의 이른바 ‘자동 유보’를 원용했다. ④피고국의 수락범위가 더 제한적이라면 피고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을 기초로 강제관할권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제평:고난도문제이다. 선택조항에 관한 판례 입장을 포괄적으로 물어본 문제로서 선택지②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음 출제되었다. 사전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버거웠을 것으로 보인다.

문 19.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96년 「런던담핑의정서」는 해양환경에 유입되는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이 그 영향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단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동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 ② 1969년 「유류오염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은 군함 또는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선박으로서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③ 중재법원은 Lanoux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 국제하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타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제관습법상 협의의무를 확인하였다.
-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Meuse강 사건에서 국가는 월경피해 금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의거한 피해예방의 무로 발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정답:①

해설:①<런던담핑의정서>는 사전배려원칙(사전주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과 오염자 부담 접근법을 규정하고 있다. ②협약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동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된다.(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warships or other ships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and used, for the time being, only on government non-commercial service. ③라누호중재사건은 국제하천의 이용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을 관습으로 확인하였다. 즉, 상류국은 하류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류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뮈즈강사건은 사전배려원칙과는 관련이 없다. 사전배려원칙(사전주의원칙)은 대체로 1980년대 국제법에 도입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평:<런던담핑의정서>나 <유류오염에 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은 처음 출제되었다. 사전주의원칙의 입법례나 연혁을 잘 알고 있으면 비교적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문 20.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술규정은 사소한 성격의 개정 또는 추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개정 및 그 규칙 또는 대상품목의 범위에 대하여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② 기술규정은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화된 상황 또는 목적이 무역에 덜 제한적인 방

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예를 들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 ④ 회원국은 비록 그밖의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기나라의 기술규정과 다를지라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술규정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

정답:①

해설:①협정 제1조 제6항.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 절차에 대한 이 협정에서의 모든 언급은 **사소한 성격의 개정 또는 추가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개정 및 그 규칙 또는 대상품목의 범위에 대한 모든 추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동등성에 대한 규정이나 합의에 기반한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된다.

문제평:TBT협정 제1조를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2021년부터 25문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경제법 조문이나 판례 출제가 예상된다. 이 문제는 그러한 변화를 미리 보여주는 문제로 생각된다.

#### (2021년 대비방향)

1. 공부범위를 상당히 확대해서 국제법에 해당되는 분야는 빠짐없이 공부해야 한다. 다수가 보는 시중 출간 교재를 섭렵해야 한다.
2. 조약은 모든 조약을 정밀하게 보기는 어렵다. 10개정도 주요 조약을 선정하여 세밀하게 공부해야 한다.
3. 10개정도의 이외의 조약들은 주요 내용을 집중정리해야 한다.
4. 판례범위는 확대될 것이므로 핵심논점뿐 아니라 부수적 논점, 선결적 항변 쟁점 등도 공부해야 한다.
5. 국제경제법이 5문항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문, 판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공부를 해야한다.
6. 공부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단권화에도 더욱 집중해야 한다.